

키 크는 주사 오인 탓?...남발되는 성조숙증 치료

광주·전남 어린이 환자 6년새 65% 급증...과잉 진료·치료제 남용 우려 치료 대상 아닌데도 “주사 놔 달라” 생떼 쓰는 부모 늘어 의료진 골머리

광주·전남에서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어린이 환자가 6년 새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조숙증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부모들이 성조숙증 치료제를 ‘키 크는 주사’로 오인해 무작정 병원을 찾고 있는 것도 환자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실비보험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자녀가 치료 대상이 아닌데도 ‘주사를 놔 달라’며 생떼 쓰는 부모도 늘어 의료진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오전 10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앞에는 성조숙증 관련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15명이 대기했다.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소아과 진료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성조숙증은 어린 나이에 2차 성징, 즉 사춘기가 일찍 오는 증상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성장판이 일

찍 닫혀 키가 덜 자랄 수 있다. 치료 방법으로는 생식샘자극호르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호르몬 주사제(GnRH-agonist)를 놓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정모(여·37)씨는 “딸(9)의 키가 또래보다 크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것 같다”며 상담을 받기 위해 이날 조선대병원을 찾았다.

정씨는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성조숙증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딸도 걱정돼 병원에 왔다”며 “아이가 성장이 일찍 멈춰버릴까 걱정되기도 하고, 올해가 지나면 보험료 적용을 받지 못하니 제때 검사를 받으려고 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발포털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성조숙증(조발사춘기) 치료를 받은 인원은 2018년 4226명, 2019년 3727명, 2020년 4742명, 2021년 5128명, 2022년 54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치료 인원이 2018년 1356명, 2019년 1539명, 2020년 2841명, 2021년 3659명, 2022년 3792명으로 증가했다.

환자 수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성조숙증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소아비만이 늘고 있는 점,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내분비계 교란이 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부모들 사이에서 성조숙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진료를 많이 받게 되고, 환자 수 또한 덩달아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성조숙증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과잉 진료 및 치료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치료제를 ‘키 크는 주사’로 인식하고 치료 대상이 아닌데도 비급여로라도 치료제를 맞으려는 이들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자녀가 검사결과 성조숙증 환자가 아닌데도 치료제를 놔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다”며 “치료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조숙증 치료 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무작정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분비검사를 거쳐 황체화호르몬(LH), 난포자극호르몬(FSH) 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치료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험 급여 또한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 성조숙증을 앓고 있지 않은 어린이에게 치료제를 처방할 경우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찬중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조숙증 치료제는 너무 이른 시기에 사춘기를 겪게 되는 어린이들에게 투여해 사춘기 시기를 또래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효능이 있다. 무조건 키가 자라지는 않는다”며 “성조숙증 치료제를 남용하지 않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인 사촌 명의 분양권 취득 전매 차익 노린 여성 징역형

장애인 사촌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전매 차익을 노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장애인 사촌 명의를 내세워 광주시 북구의 신축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분양의 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 사촌의 명의를 빌려 대신 장애인 사촌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 40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취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한 범죄”라면서 “장애를 가진 사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분양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체험학습중 장애 유치원생 바다 빠져 숨져

목포해경, 사고 경위 조사

목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장애를 가진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께 목포 갯바위 남동기념관 주차장 인근에서 A(5)양이 보호자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하지만 10여분 뒤인 11시께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선착장에서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됐다.

해경이 첫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13분만에 도착해 물에 빠진 A양을 구조했지만 병원 이송과정에서 숨졌다.

목포의 한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A양은 이날 바닷가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 체험학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체험에는 장애를 가진 A양을 포함해 유치원 2개반 원생 14명이 참여했고, 체험현장에는 인솔교사 3명과 체험해설사 2명 등 성인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인솔교사는 경찰조사에서 “A양의 손을 놓쳐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양이 인솔교사의 손을 놓친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뇌물수수 수감 전 강진군 비서실장 추가 징역형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강진 가우도관광단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전 강진군 비서실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of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공사를 맡은 업체에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키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3월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과일을 사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

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강진군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지역개발 사업, 도시계획 사업 등 중요 사업 정책의 최종 결정 및 예산 배정,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의 사정 변경이 없고 이미 원심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형을 선고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행하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건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올해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간호학도들의 나이팅게일 선사식

12일 광주시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사식이 열려 간호학과 학생들이 선사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일본 눈치보느라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시민모임, 외교장관 ‘강제징용 해법 고려’ 발언에 “굴욕외교 전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및 서훈 수여에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고개를 숙여 서훈에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절차를 재개할지 여부

에 대해 “현재 강제징용 관련 정부해법이 이행되고 있는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에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상 수상을 무산시키더니 이번에는 대일 관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며

“양 할머니 서훈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연결해 판단하는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일본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을 시작으로 32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 할머니를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모란장의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외교부의 이의 제기로 무산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